

초록번호 01-5

제 목	국 문	주치의등록제 시행에 관한 조사연구		
	영 문	An analysis of Opinion Polls for Family Medicine Specialists on the implementation of Family Doctor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저 및 소	국 문	이재호, 문옥륜*, 이운창**, 윤수진***, 이범**, 전철수**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가정의학과 개원의**, 아주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영 문	Jae Ho Lee, Ok Ryun Moon*, Woon Chang Lee**, Soo Jin Yoon***, Bum Lee**, Chul Soo Jun**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Taejon St. Mary Hospital,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Private Family Clinic**,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Ajou University Hospital***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이재호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 해방후 자유방임형 의료체계를 기본형태로 유지해왔던 남한의 의료체계는, 고가의 장비와 약물을 이용하는 치료의학 위주로 발전하였고 예방과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1차 보건의료제도는 취약한 채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1차의료 이용에 있어서 혼란스러워 하며, 개개인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의 하나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주치의를 정하고 그 주치의를 우선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주치의등록제는 시범사업(1996) 단계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등록제는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제도를 다시 추진할 때에는, 1차의료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가정의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비중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조사연구에 착수하였다.</p> <p>2. 연구 방법 가정의학회 등록 전문의(1986-1997) 총 2,093명을 대상으로 1998년 3월 18일부터 5월 30일 까지 2차에 걸쳐 우편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진료여건(7문항), 가정의로서의 역할(9문항), 직업만족도(3문항), '주치의등록제 시행'에 관한 주요 견해(10문항), 제도시행 찬성여부(1문항), 시범사업 참여의향(1문항), 주치의 등록비(1문항), 예상 등록환자수(1문항), 주치의의 범위(1문항), 주치의등록제 시행 실패이유에 대한 견해(1문항) 등 총 35문항이었다. 통계분석은 SAS 6.1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hi-square test, ANOVA test, 그리고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p>				

3. 연구결과

총 응답율은 28.2%에 불과했으나, 응답자의 분포가 조사대상자의 분포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 회신자 중 '주치의등록제 시행'에 대해 찬성 58.5%, 반대 14.4%, 잘 모름 24.7%, 무응답 2.4%로 나타났다. 정규 가정의의 경우, 찬성 69.9%, 반대 11.0%, 잘 모름 17.3%로, 비정규 가정의에 비해 찬성율이 높았다. 근무유형별로 개원의는 '찬성' 50.8%로, 대학병원 교직의(85.1%), 일반 병의원 봉직의(66.2%), 비영리기관 봉직의(74.4%)에 비해서 매우 낮았다. 가능한 교란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규 가정의는 비정규 가정의에 비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광역시는 서울에 비해, 비영리기관 가정의는 개원 가정의에 비해서, 가정의로서의 역할점수가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환자수가 적을 수록 제도시행을 '찬성'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에서 1인당 1년간 등록비는 5-6만원(36.4%), 3-4만원(27.6%) 등의 순이었으며, 그 가중평균은 47,000원이었다. 주치의 담당의사의 적합한 범위로는 일차의사에 내-소아과 의사 포함 31.5%, 일차의사만 포함 27.9%, 모든 의사 포함 20.3% 등의 순이었으며, 40세 미만군은 일차의사에 내-소아과 의사를 포함시키자는 의견(39.0%)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예상하는 등록환자수는 1,000명 미만(34.4%), 잘 모른다(32.5%) 등의 순이었고, 그 가중평균은 1,076명으로 나타났다. 주치의등록제 시행에 관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찬성'군과 '반대'군 사이에 대체로 상반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었으나, '기록이송 및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가 많아 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73.6%가 긍정적 응답을 하였고, 찬성군과 반대군에서 공통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주치의의 순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21.3%만이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고, 찬성군과 반대군에서 공통적으로 수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4. 고찰

1996년 정부의 주치의등록제 시범사업은, 대국민 홍보부족, 국민과 의사단체를 대상으로 한 충분한 여론수렴 부재, 부실한 재정적 뒷받침 등 정부의 제도시행 추진의지가 미약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시범사업안의 내용에 있어서도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의 문제, 과도한 행정서식과 절차, 의사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유인의 미약함 등의 문제점들을 노정시켜 의사단체의 거센 반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치의를 담당할 순수한 의미에서의 일차의사가 절대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의료영역이 단과전문 개원의에 의하여 크게 침범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료현실임에도, 정부의 일차의사 양성계획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시행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일차의사 양성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대상이 전체의사가 아니고 가정의학 전문의에 국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조사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